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주매일: 063-859-2400 ~ 241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2월 23일 금요일 (음 1월 8일) 제199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한국GM 군산공장 정상화 전력투구

송 지사, 이낙연 총리에 “폐쇄 방침 철회 전제로 협상 임해줄 것 요청”

송 지사가 한국GM 군산공장 정상화와 군산조성소, 서남대 폐교 등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절박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송 지사는 22일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 정부가 한국GM과 경영정상화에 대한 협의를 “반드시 군산공장 폐쇄 방침 철회를 전제로 협상에 임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또한 이 국무총리에게 “한국GM 군산공장은 꼭 재가동 되어야 하며 전 복경계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는 만큼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회생과 일자리, 고용안정 지원 정책 시행에 전력투구를 달라”고 간절하게 건의했다.

우선 “국무총리 주재로 범정부 관계 부처 대책회의를 군산 현장에서 개최해 군산지역을 비롯한 전북경제의 위기 상황을 직시해 달라”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에 따른 신속한 절차 이행 등 후속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호소했다.

송 지사는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성소 가동 중단에 이어 이번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방침으로 인해 군산시민은 물론 전북 도민들은 고용불안 등 큰 상실감에 빠져 있다”며 “이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주력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과 다변화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들러 친환경차와 스마트 카 등 자동차산업의 기술변화에 대응하고 전북지역의 경제위기 극복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마련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존 상용차 산업의 경우 ‘미래형 자율주행 혁신클러스터’로 육성 ▲조선산업은 ‘지능형 해양 무인인도체 거점 클러스터’ 조성 ▲군산·새만금 일대를 ‘재생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등 정부의 다변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도는 또 지난해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된 군산 근대문화유산 역사지구 등 관광 여행산업을 키워 시급한 서면경계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군산 구도심을 ‘아시아 근대역사문화 시간여행 벨트’로 조성 ▲선유도 등 고군산군도를 ‘서해안 신해양관광 허브’로 조성하는 등 관광활성화 방안을 정부 정책에 반영해 적극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송 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당면한 현안들과 함께 군산시가 요청한 군산 전북대병원 설립 등에 대해서도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국무총리께서 직접 챙겨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서남대 폐교 관련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남원에 반드시 이뤄져야”

이날 군산지역의 경기 침체 뿐만 아니라 전북 동부권에 위치한 유일한 종합대학인 남원 서남대가 폐교되는 상황여서 전북 지역내 균형발전 노력이 물거품 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민심 회복 등을 위한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특히, 서남대 폐교와 관련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이 남원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 ▲남원권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한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필요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전담한 군산산업단지 노후 기반시설 정비와 남원 사매 일반산업단지 조기 완공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 요청에 대해서도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총리께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김진성 기자



“이제 졸업이다”
22일 오전 10시 전북대학교 2017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2월 삼성문화관에서 거행된 가운데 졸업생들이 학사모를 위로 던져올리며 기뻐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물지마’ 식 임대료 인상 제동... 전주發 임대차계약 사전신고제 도입

김승수 전주시장이 부영의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저지하면서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요구했던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사전신고제가 정부 차원에서 도입된다.

특히 임대차계약 사전신고제는 임대료 인상 시 증액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한 뒤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사실상의 승인 절차여서 ‘물지마’ 식 임대료 인상에 제동을 걸었다.

22일 시에 따르면 (주)부영주택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계약 사전신고제 등의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오는 7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김시장의 주도로 전국 22개 기초자치단체가 (주)부영주택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하고 민간임대파트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공동대응에 나선 결과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물가 상승률 등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기 마련돼 서민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됐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100세대 이

상의 공공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인상 시 관할 지자체에 사후 신고하던 것을 임대료 인상 1개월 전에 증액에 따른 신고서 제출 후 필증을 교부받는 사전신고제가 도입된 것이다. 신고 필증을 교부받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동시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료 증액 청구 기준이 부당할 경우 그 내용을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또한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료 증액 시 임차인에게 이를 설명하고 확인받아 기록하는 설명 의무도 신설됐다. 향후 국회를 상대로 연간 임대료 인

상률을 현실에 맞게 인하하는 내용을 포함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꾸준히 촉구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정동영 의원이 발의한 임대료 인상을 상한선을 연 5%에서 연 2.5%로 제한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토교통부도 오는 4월 완료 예정인 ‘임대료 현황실태조사 및 증액기준 개선 관련 연구 용역’ 결과물과 지자체 의견을 반영한 임대료 인상 기준안을 마련, 임차인 보호를 위한 탈법적 임대사업자의 법적 및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규남 기자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이뤄지나?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6월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등 10명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국민연금공단 업무에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 업무를 추가하고 연기금 전문대학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연기금은 613조원을 육박하며

매년 성장추세로써 연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을 통한 부족한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법안소위 심사 시 여의의원들은 대학원 운영 및 커리큘럼 구성 등 일

부 이견이 있었지만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은 자금운용 본부를 비롯한 공적연기금 기관에 우수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자산운용을 선도하는 전문인력 양성으로 국내외 자본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때라는 설득을 통해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김진성 기자

“토·일요일 신문 읽니다.”

사랑해도시인 품격서전주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